광주·전남 방문 정운찬총리 무슨 얘기 나눴나

"혁신도시 피해없다" 세종시 홍보만

"대선 4번 모두 DJ 지지" 호남 인연 강조

지역현안 건의엔 "검토해 보겠다" 반복

정운찬 총리는 26일 광주·전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지역과의 각별한 인연을 강조하며,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지역의 반대 여론을 다독이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정 총리의 '호남 구애'에도 불구하고,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인사들은 "세종시로 인한 지역 발전 저해는 없다"는 정 총리의 발언에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다.

◇**호남과의 각별한 인연 강조**=이날 정 총리는 과거 호남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광주·전남에서의 세종시 수정안 지지를 호소했다. 정 총리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서울대 사감으로 근무했을 때 군인들이 들이닥쳐 크게 혼났으며, 이후 직선제 개헌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며 "그러한 계기로 광주의 의기와 민주화에 대한 열정에 공감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골수 야구팬인 정 총리는 "원래는 두산 베어스 팬이었지만, 과거 해태타이거즈가 9번 우승한 뒤 그 뒤로 성적이 떨어지자 기아타이거즈를 응원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일화도 소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맞붙은 1971년 당시 김 전대통령의 선거유세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정 총리는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공개해야하는 지 모르겠지만, 1971년부터 4번 모두 김 전대통령을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대책 제시는 안 해**=이 같은 정 총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각계 대표들은 오찬간담회 뒤 "세종시에는 기초과학 및 이론, 광주·전남은 상용 및 응용으로 가면 된다고 하는 데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겠는가"라고 되묻고 "세종시 조성에만 17조원 이상의 정부재원이 들어가는데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같은 혜택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역 인사들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루 앞두고 이 지역을 전격 방문한 정 총리가 광주·전남지역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난 20일 대구·경북 방문 때와 같이 과거 세종시 수정안 홍보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전태갑 동북아상품거래소 유치설립기획위원장의 '광주설립 지원'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검토 후 건립 장소 결정', 장병완 호남대 총장의 '광주 R&D특구 조기지정 및 육성', 신용진 광주전략산업기획단장의 'LED조명도시 조성 지원'요청에 대해서는 각각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 '광주에 응용분야를 중점 육성하도록 상호 분업' 등이라고 간략하게 답했다. 또 주영순 목포 상공회의소 회장의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건의에 대해서 최장현 국토해양부 2차관은 "광주에서 목포까지 노선안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므로 별도로 추진 중인 용역을 거쳐 지역과 협의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하는 등 정 총리와 동행한 정부부처 관계자도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편 앞서 광주과학기술원(GIST)을 방문한 정 총리는 GIST가 단기간 내에 국내 대표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한 것을 치하한 뒤, GIST에서 건의한 '학부 신입생 10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이트 랩(Site-Lab) 유치 지원 요청에 대해서 동행한 교육과학부 관계자에게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루 앞둔 26일 오후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일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현장을 방문, 박준영 전남지사로부터 혁신도시 조성 계획 및 추진 상황 등을 설명듣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李대통령 인도순방 딸·손녀 동행

野 "부적절한 처신"…사과·여행 경비 반납 요구

이명박 대통령의 인도 순방길에 딸과 손녀가 동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의 정상외교에 자녀들이 동행하는 것은 국내 관행상 극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국제적 관행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26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 내외의 인도 국빈 방문길에 장녀인 주연씨와 손녀가 동행했다.

주연씨와 손녀는 25일 인도 뉴델리에 있는 산스크리티 학교를 김윤옥 여사와 함께 방문했고 26일 인도 공화국 선포 60주년 기념 퍼레이드에도 이 대통령 내외와 함께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 자녀를 동행시킨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대통령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딸과 손녀의 해외여행을 위해 국민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 특별기를 가족여행 특별기로 이용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아들을 히딩크 감독 옆에 세워서 사진을 찍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번에 딸과 손녀까지 특별기에 태워서 데려갔다면 이는 국민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처신"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하며 딸과 손녀의 여행 비용은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가족 일부의 순방길 동행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인도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가족 동반을 요청했었다"며 "동행한 가족의 경비는 자비로 부담토록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정상외교에서 대통령의 가족 동반은 국제적 관례에 벗어나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한 뒤 "공당의 대변인이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대통령의 국익 외교를 폄하하고 정치공세를 편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도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가족을 초청했는지, 경비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다보스 포럼 동행 여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되지는 않아 추후 정치적 논란거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2월 임시국회 난제 산적

세종시·사법개혁·아프간 파병…여야 갈등 예고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권은 세종시와 사법개혁, 정치개혁,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 각종 현안을 놓고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달 1일부터 3월2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또 내달 1일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이어 2~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5일간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세종시 수정안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세종시 관련 법안의 국회 제출에 앞서 27일 입법예고하면서 임시국회 초반부터 여야 또는 여여 간에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세종시 수정을 반대하는 야당과 여당의 친박(친 박근혜) 진영은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를 압박함은 물론, 관련 상임위에서도 공세를 이어간다는 태세인 반면 여권의 주류는 세종시 수정의 불가피성을 설득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6·2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전초전' 성격의 임시국회라는 점에서 세종시 문제를 필두로 득표를 의식한 여야간 선명성 경쟁은 더욱 가파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법개혁과 국회개혁·정치개혁·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4대 개혁·개편 과제"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다.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2월 국회 기간에 구성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법원 내 사조직 해체 및 판사 임용방식 개선 등 법원 개혁에, 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죄 처벌 강화를 비롯한 검찰 개혁에 각각 방점을 찍고 있어 특위 활동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방선거에 대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법정비 작업도 이어질 예정이다.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작업이 급선무인 가운데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 문제, 지구당 부활 문제, 광역·기초의회에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비례대표 비율 상향 문제 등이 여야간 논쟁거리다.

이밖에 아프간 파병 문제, 미디어법 통과에 따른 종합편성채널 선정 문제 등을 놓고도 여야간 대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우병 보도' PD수첩 손배소도 기각 "정정보도 청구도 근거 없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26일 "MBC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관련 왜곡 보도를 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만큼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국민소송인단 1천292명이 ㈜문화방송과 조능희·송일준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PD수첩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했다"며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방송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 사회 문제점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방송의 역할과 기능이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소 사실과 다르거나, 과학적 증명이 안된 가설을 사실처럼 보도함으로써 시청자에게 불안감이나 불신을 줬다고 해도 그 정도는 개별 시청자에 따라 지극히 주관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일반 시청자에 불과한 원고들이 PD수첩 방송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이 방송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사과방송 청구와 대해서는 "사과보도 청구는 우리 법 규정상 이를 허용할 근거도 없다"며 "사과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사과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지난해 2·3차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해 ㈜문화방송과 PD수첩 담당 PD 등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